이달의 초점

# 이주민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


한국 복지국가의 반이민태도 현황과 함의점

**|김경환|**

세대 간 이주민 수용성 인식과 이민정책의 과제

**|곽윤경|**

이주민 사회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내국인 태도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복지포럼** [2025. 07.] DOI: 10.23062/2025.07.3

# 세대 간 이주민 수용성 인식과 이민정책의 과제[1)]

Generation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Policy in South Korea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이주민 인구가 증가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세대별 이주민 수용성,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은 유학생이나 영주권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용성을 보였으며, 중년층과 노년층 역시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반면, 난민에 대한 수용성은 전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는 세대와 다문화주의 인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모든 세대에서 인력 부족 산업에 한해 외국 인력 유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외국인 수를 제한하자는 견해는 노년층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다문화주의 인식이 높은 집단은 외국 인력을 포용적으로 수용하는 반면, 동화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주의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접촉 경험이 이주민 인식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간 인식 차이와 이주민 유형별 수용성 차이를 반영한 정책 설계, 그리고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1 들어가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민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2022년

1) 이 원고는 곽윤경, 김기태, 정세정, 강예은, 김지원. (202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를 수정·보완 및 재분석하여 작성한 것이다.

5167만 명에서 2042년 4963만 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인구는 같은 기간 165만 명에서 28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통계청, 2024). 특히 생산연령인구의 급감 속에서 외국인 인구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2024년에는 이주 배경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이주민을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그 양상은 점점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수용성지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에는 52.27점으로 나타났다(김이선 외, 2021, p. ii). 한국인은 이주민을 '직장 동료'나 '이웃'으로는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가족'이나 '친한 친구'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성을 나타냈다(곽윤경 외, 2019). 또한 북미나 유럽 출신 이주민에 비해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게 더 많은 거리감을 느끼고(김석호, 2019; 김범수 외, 2023), 체류 자격에 따라서도 인식이 달라져 비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특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장주영,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이주민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체류 목적이나 법적 지위, 문화적 배경에 따른 이질적인 특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이주민 수용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이주민 수용성과 인식에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세대별 차이가 이주민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아직 미비하다.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주의 인식은 이주민 수용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변수로, 사회통합의 수준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는 외국인의 유입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조건에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수용의 범위를 반영하는 반면, 다문화주의 인식은 이주민과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 구성의 일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두 요소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단순히 이주민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넘어 어떤 이주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계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대별로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주의 인식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이주민 수용성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주민의 이질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미흡한 기존의 접근에서 벗어나 이주민을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주민 수용성, 이민정책 선호, 다문화주

의 성향에 대한 태도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사회통합 정책 방향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세대별 인식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를 통해 이주민과 내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가. 분석 자료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년에 걸쳐 매년 수행하였다. 사회통합과 관련한 대주제인 사회이동성, 행복, 사회갈등과 관련한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곽윤경 외, 2024). 2024년 '사회통합 실태진단'의 표본 추출은 집계구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다. 집계구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지리정보서비스(GLS) 용도별로 선정한 단위로, 평균 1.1㎢, 집계구당 평균 200~300가구로 구성된다(곽윤경 외, 2024). 이번 조사에서는 500개 집계구를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으로 추출하였으며, 집계구당 6개 가구를 계통 추출하여 총 3000가구를 표본으로 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74세 성인 남녀 총 30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곽윤경 외, 2024).

### 나. 주요 변수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활용한다. 첫

**[표 1] 이주민 수용성 관련 변수**

| 구분 | | 문항 | 척도 |
|---|---|---|---|
| 수용성 | 전반적 수용성 | 귀하는 이주민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① 나의 배우자 혹은 가족이 되는 것,<br>②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br>③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br>④ 나의 이웃이 되는 것,<br>⑤ 받아들일 수 없음. |
| | 이주민 대상별 수용성 | 귀하는 이주민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br>1) 이주노동자<br>2) 난민<br>3) 결혼이주민<br>4) 유학생<br>5) 재외동포(고려인, 조선족 등)<br>6) 북한이탈주민<br>7) 영주권자 | ① 나의 배우자 혹은 가족이 되는 것,<br>②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br>③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br>④ 나의 이웃이 되는 것,<br>⑤ 받아들일 수 없음. |

출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곽윤경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88-289.

째, 이주민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민 전반적 수용성과 이주민 대상별 수용성 관련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Borgadus(1925)의 사회적 거리 척도(Social Distance Scale)를 한국적 맥락에 맞게 변형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즉 응답자가 특정 집단에 대해 얼마나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해당 문항을 나의 배우자 혹은 가족이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음 등 총 5개의 보기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이주민 대상별 수용성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여기서는 이주민을 동질한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주노동자, 난민, 결혼이주민, 유학생, 재외동포(고려인, 조선족 등), 북한이탈주민, 영주권 취득자 등 7개의 세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주의 인식 관련 변수는 〈표 2〉와 같은 문항을 활용한다. 저출

**[표 2] 이민 및 다문화 수용 태도**

| 구분 | 문항 | 척도 / 선택 문항 |
|---|---|---|
| 이민정책 선호 |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귀하는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산업 분야 제한 없이 외국인은 누구든지 일하러 올 수 있어야 한다.<br>② 인력 부족이 심각한 산업 분야에 대해 외국 인력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br>③ 인력 부족이 심각한 산업 분야로 제한하고 외국인 수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br>④ 외국인이 한국에 일하러 오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 | 1) 위 문항에서 ① + ②로 답하신 이유는? | ①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외국 인력이 채워 주기 때문<br>②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br>③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br>④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br>⑤ 기타 |
| | 2) 위 문항에서 ③ + ④로 답하신 이유는? | ① 공공서비스 및 복지에 대한 부담 증가 우려<br>② 미등록 체류자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br>③ 내국인과의 문화적 갈등 우려<br>④ 내국인의 일자리 감소 우려<br>⑤ 기타 |
| 다문화주의 성향 | 귀하는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이주민이 '그들 고유의 문화,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 관습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들 고유의 문화, 관습을 유지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중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 10점 척도(① 고유의 문화,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 관습을 수용해야 한다 ~ 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접촉 빈도 | 귀하는 일상생활(대중교통, 쇼핑센터, 길거리, 학교, 직장 등)에서 외국인을 얼마나 자주 마주치십니까? | ① 자주 만난다.<br>② 가끔 만난다.<br>③ 거의 만날 일이 없다.<br>④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

출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곽윤경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88, p. 230.

산 고령화하의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산업 제한 없이 누구나 허용', '인력 부족 산업에 최대한 허용', '인력 부족 산업으로 제한하되 인원도 제한해야 함', '외국인 입국 금지')을 선택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를 묻는 부가 문항을 함께 제시하였다. 외국 인력 유입에 수용적인 집단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외국인이 채워 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대응 필요', '경제 활성화에 도움',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타'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배타적 집단은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 증가', '미등록 체류자 증가 가능성', '문화적 갈등 우려', '내국인 일자리 감소 우려', '기타'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 수용 태도에 대해 물어보았다. 해당 응답은 10점 척도로, 분석은 동화주의 성향, 다문화주의 성향, 그리고 중도주의 성향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다. 응답자 특성

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011명으로, 이 중 청년층(만 19~34세 이하)이 27.45%, 중장년층(만 35~64세 이하)이 57.46%, 노년층(만 65세 이상)이 15.10%를 차지하였다. 성별 구성은 남성 50.83%, 여성 49.17%로 큰 차이는 없었다. 세대별로는 청년과 중장년층에서 남성 비율이 높았으나, 노년층에서는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지역 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51.57%),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57.67%로 가장 높았다. 노년층은 비수도권(55.35%) 거주 비율이 수도권(44.65%) 거주 비율보다 높았다. 최종 학력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졸 이상(51.65%)이 가장 높았는데, 세대별로는 청년층(81.34%) 대졸 이상이 가장 높았다. 노년층은 중졸 이하(47.42%)가 가장 많아 세대 간 학력 수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 분포를 보면 중간층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49.56%)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중하층(35.76%), 하층(10.4%)의 순이었다. 노년층의 경우 하층으로 응답한 비율이 20.57%로 가장 높아 상대적 빈곤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화된 가구소득 분위별로 보면 노년층의 절반 이상(57.52%)이 1분위에 속해 세대 중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청년층은 4분위 및 5분위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중상위 계층 비율이 높았다. 중장년층은 소득분위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하위 계층(1분위와 2분위) 비율도 적지 않았다. 경제활동 상태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38.97%)가 가장 많았는데, 청년층(56.14%)과 중장년층(39.15%)에서 주를 이루었다. 노년층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47.71%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 접촉 빈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6.72%가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청년층의 접촉 경험 비율이 83.02%로 가장 높았고, 노년층은 66.94%로 가장 낮아 세대 간 이주민 접촉 경험의 격차가 나타났다.

**[표 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 구분 | | 전체 | | 청년 (만 19~34세 이하) | | 중장년 (만 35~64세 이하) | | 노년 (만 65세 이상) |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전체 | | 3,011 | 100 | 826 | 27.45 | 1730 | 57.46 | 455 | 15.10 |
| 성별 | 남성 | 1,531 | 50.83 | 375 | 52.22 | 921 | 51.00 | 232 | 47.7 |
| | 여성 | 1,480 | 49.17 | 344 | 47.78 | 885 | 49.00 | 254 | 52.3 |
| 지역 | 수도권 | 1,553 | 51.57 | 415 | 57.67 | 912 | 50.48 | 217 | 44.65 |
| | 비수도권 | 1,458 | 48.43 | 304 | 42.33 | 894 | 49.52 | 269 | 55.35 |
| 최종 학력[1] | 중졸 이하 | 307 | 10.21 | 2 | 0.26 | 94 | 5.18 | 230 | 47.42 |
| | 고졸 | 1149 | 38.14 | 132 | 18.4 | 842 | 46.64 | 203 | 41.7 |
| | 대졸 이상 | 1555 | 51.65 | 585 | 81.34 | 870 | 48.18 | 53 | 10.88 |
| 주관적 소득계층 | 하층 | 313 | 10.4 | 48 | 6.66 | 172 | 9.51 | 100 | 20.57 |
| | 중하층 | 1,077 | 35.76 | 262 | 36.37 | 639 | 35.37 | 176 | 36.12 |
| | 중간층 | 1,492 | 49.56 | 384 | 53.36 | 905 | 50.12 | 197 | 40.48 |
| | 중상층·상층 | 129 | 4.29 | 26 | 3.6 | 90 | 5 | 14 | 2.83 |
| 균등화한 가구 소득분위 | 1분위 | 610 | 20.26 | 70 | 9.8 | 279 | 15.47 | 280 | 57.52 |
| | 2분위 | 659 | 21.9 | 146 | 20.28 | 425 | 23.55 | 90 | 18.58 |
| | 3분위 | 558 | 18.54 | 151 | 21.07 | 359 | 19.89 | 43 | 8.81 |
| | 4분위 | 632 | 21 | 182 | 25.27 | 397 | 21.96 | 47 | 9.58 |
| | 5분위 | 551 | 18.29 | 170 | 23.58 | 345 | 19.13 | 27 | 5.52 |
|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임금근로자 | 1,173 | 38.97 | 404 | 56.14 | 707 | 39.15 | 34 | 7.05 |
| | 임시, 일용직, 특고 | 314 | 10.41 | 63 | 8.79 | 188 | 10.43 | 65 | 13.28 |
| | 고용주, 자영자 | 611 | 20.29 | 38 | 5.25 | 478 | 26.49 | 117 | 24.05 |
| | 무급가족종사자 | 39 | 1.29 | 1 | 0.13 | 22 | 1.21 | 18 | 3.72 |
| | 실업자 | 130 | 4.32 | 41 | 5.65 | 67 | 3.73 | 20 | 4.18 |
| | 비경제활동인구 | 744 | 24.71 | 173 | 24.03 | 343 | 18.99 | 232 | 47.71 |
| 접촉 빈도 | 있음 | 2,310 | 76.72 | 597 | 83.02 | 1,378 | 76.28 | 325 | 66.94 |
| | 없음 | 701 | 23.28 | 122 | 16.98 | 428 | 23.72 | 161 | 33.06 |

참고: 1) 중졸 이하는 고교 중퇴 포함, 고졸은 대학 중퇴 포함, 대졸 이상은 대학 수료 및 대학원 포함.
2) 개인 표준 가중치 적용.
출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곽윤경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저자 분석.

## 3 세대별 이주민 수용성의 전반과 유형별 차이

### 가. 세대별 이주민 유형별 수용성

청년층은 유학생과 영주권자에 대해 가장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그림 1). 유학생을 '나의 배우자 혹은 가족'(7.2%)이나 '절친한 친구'(39.6%)로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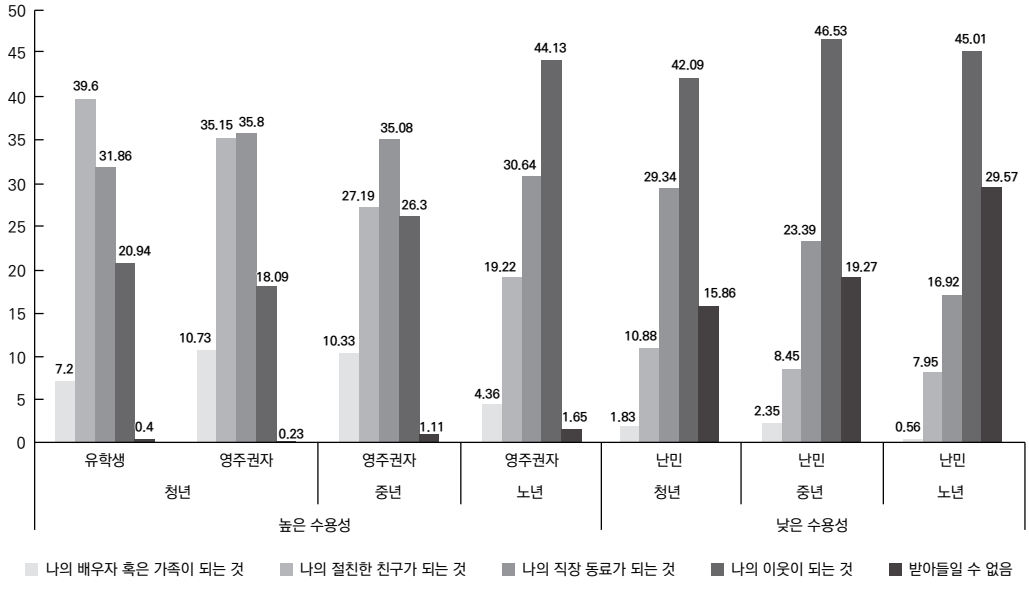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나의 절친한 친구'(35.15%)로 수용성이 높았다. 반면 난민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현저히 낮았다. '나의 배우자 혹은 가족'(1.83%)이나 '절친한 친구'(10.88%)로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이 매우 적었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15.8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이 이주민의 사회적 지위나 체류 자격에 따라 수용성에 차이를 두며,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갖춘 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중년층은 영주권자에 대해 가장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난민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성향이 두드러졌다(그림 1). 영주권자를 '나의 배우자 혹은 가족'(10.33%)이나 '절친한 친구'(27.19%)로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난민의 경우 '나의 이웃'으로 제한적 관계만 수용(46.53%)하고 있었다.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19.27%)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노년층 역시 영주권자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그림 1). 영주권자를 '나의 배우자 혹은 가족'(4.36%)이나 '절친한 친구'(19.22%)로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난민의 경우 '나의 이웃'으로 제한적으로 수용(45.01%)하

**[그림 1] 세대별 이주민 유형별 수용성**

(단위: %)




참고: 개인 표준 가중치 적용.
출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곽윤경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저자 분석.

는 경향이 가장 많았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29.57%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노년층이 기존 사회질서와 공동체 유지를 중시하며, 익숙하지 않은 난민 집단의 유입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음을 시사한다.

## 나. 세대별 이주민 전반 수용성

전체 응답자와 세대별 이주민 수용성에 대한 인식은 [그림 2]와 같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약 39%는 이주민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으며, ‘직장 동료’는 약 31%, ‘절친한 친구’는 약 18%, ‘배우자 또는 가족’은 약 8%였다. 이주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도 4.07%로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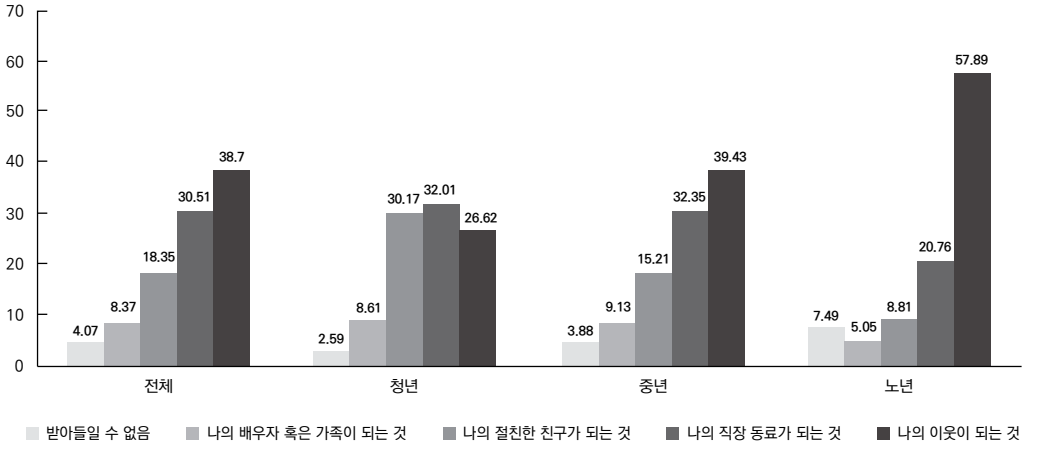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은 ‘절친한 친구(30.17%)’나 ‘직장 동료(32.01%)’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아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청년층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년층은 ‘이웃(39.43%)’ 또는 ‘직장 동료(32.35%)’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이는 중년층이 실용적이고 제한적인 관계 수준에서 이주민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년층은 ‘이웃(57.89%)’으로 받아들일 수 있

**[그림 2] 세대별 이주민 전반 수용성**

(단위: %)




참고: 개인 표준 가중치 적용.
출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곽윤경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저자 분석.

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주민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 또한 7.49%로 가장 높았다. 즉, 노년층은 일상적이고 제한적인 접촉 수준에서는 수용하지만, 보다 밀접한 관계나 정서적 거리의 축소에는 거부감을 나타내는 양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4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주의 인식

### 가.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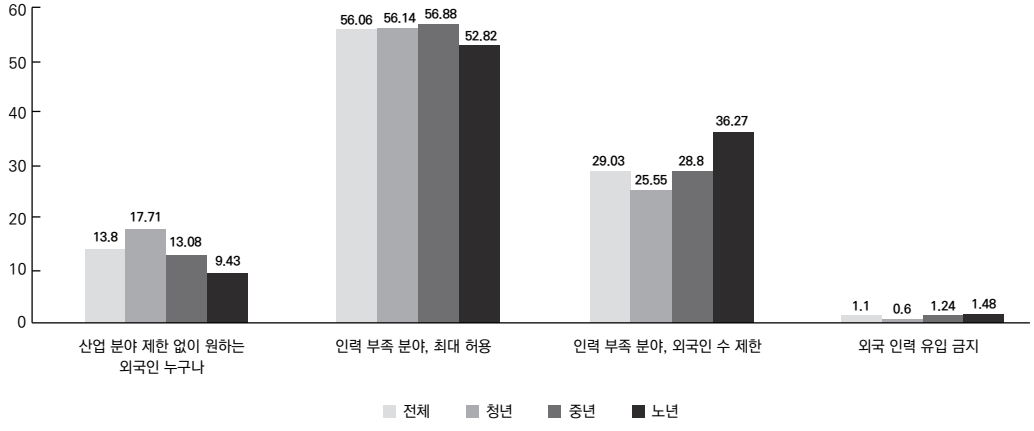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전제하에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세대별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청년층(17.71%)은 산업 분야에 제한 없이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전체 평균(13.8%)보다 높은 수치였다. 반면 노년층(9.43%)은 가장 낮아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력 부족 산업 분야에 한해 최대한 외국인력을 허용하자는 입장에서는 청년층(56.14%)과 중년층(56.88%), 노년층(52.82%) 모두 절반 이상이 동의하여, 세대 간 큰 차이 없이 외국 인력 유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다만 노년층은 인력 부족 산업 내에서도 외국인 수에 대한 제한 필요성에 더욱 공감(36.27%)하며, 외국 인력 수용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조건부적인 접근 태도를 보였다.

**[그림 3] 세대별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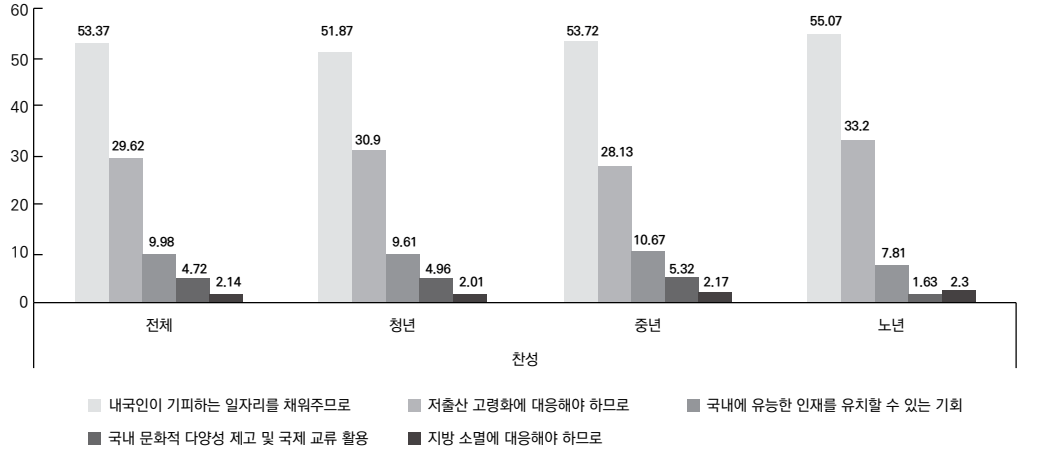
(단위: %)




참고: 개인 표준 가중치 적용.
출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곽윤경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저자 분석.

## [그림 3-1] 세대별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인식-수용적 태도를 지닌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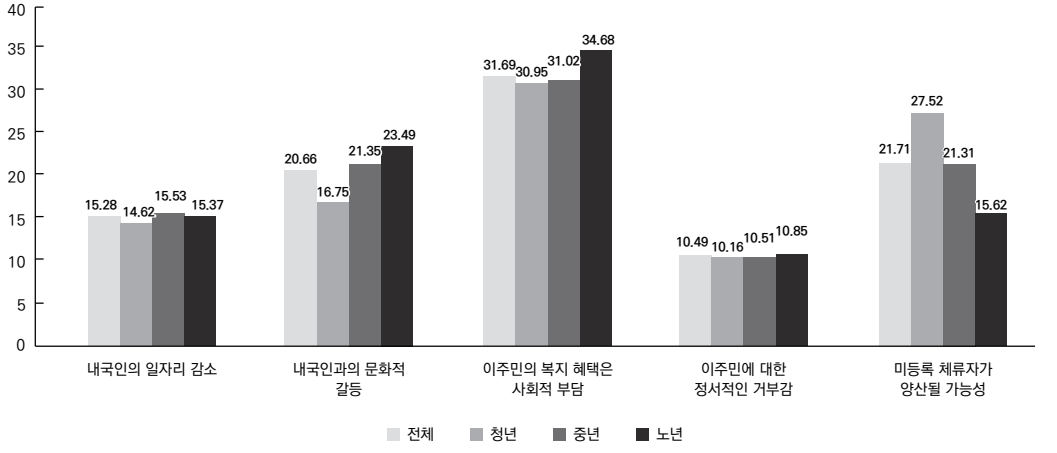
(단위: %)




참고: 1) '기타' 값 삭제함(전체 응답자 '기타'는 0.19%, 청년은 0.64%).
2) 개인 표준 가중치 적용.
출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곽윤경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저자 분석.

## [그림 3-2] 세대별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인식-배타적 태도를 지닌 집단

(단위: %)




참고: 1) '기타' 값 삭제함(전체 응답자 '기타'는 0.16%, 중년은 0.28%).
2) 개인 표준 가중치 적용.
출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곽윤경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저자 분석.

한편, '산업 제한 없이 누구나 허용' 또는 '인력 부족 산업에 최대한 허용'이라고 응답한 집단을 '수용적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이 외국 인력을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주요 이유로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외국 인력이 채워 주기 때문" (53.37%)이 가장 많았다. 특히 노년층에서 이 응답 비율은 55.07%로 가장 높아, 외국 인력을 노동력 보충의 수단으로 보는 도구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유도 노년층에서 33.2%로 다른 세대보다 다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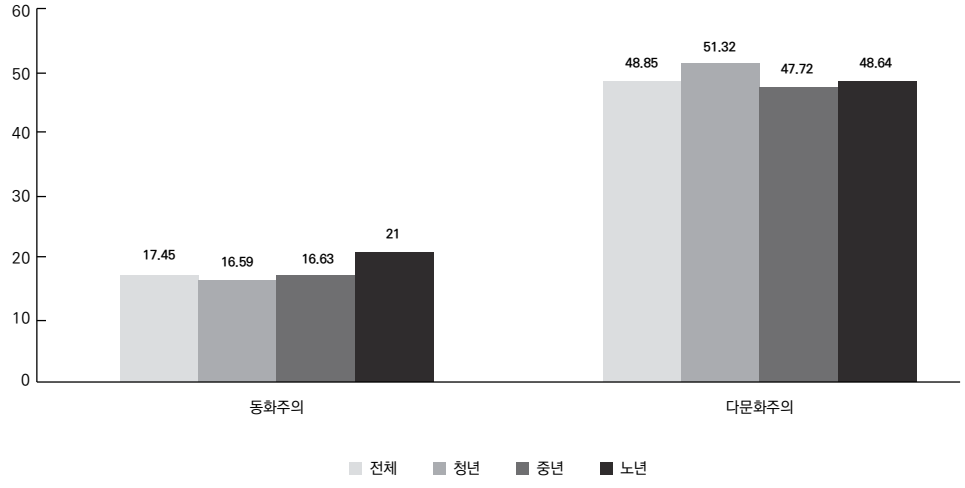
반대로 '인력 부족 산업으로 제한하되 그 인원도 제한해야 함' 또는 '외국인 입국 금지'를 선택한 응답자는 배타적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주요 이유는 "복지 혜택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31.69%)였다. 노년층은 이 응답이 34.68%로 가장 높아, 복지 재정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었다. 반면 청년층은 "미등록 체류자 증가 가능성"(27.52%)을 가장 많이 지적해, 세대별 배타성의 근거가 서로 다름을 보여준다. 즉, 노년층은 사회적 비용 부담, 청년층은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 측면을 우려하고 있었다.

## 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

세대별 다문화주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그림 4), 전체적으로 다문화주의에 긍정적인 태도가 48.85%

**[그림 4] 세대별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

(단위: %)




참고: 1) 해당 응답은 1~4점은 동화주의, 5~6점은 중도주의, 7~10점은 다문화주의로 코딩함.
2) 개인 표준 가중치 적용.
출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곽윤경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저자 분석.

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다문화주의 성향이 51.32%로 가장 높았으며, 노년층은 동화주의 성향이 21%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도주의 성향은 중년층(35.3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세대 간 큰 차이는 없었다.

또한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에 따른 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접촉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다문화주의 성향이 50.2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험이 없는 집단은 44.22%로 낮았다. 접촉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동화주의 성향이 25.13%로 더 두드러졌으며, 이는 접촉 자체가 다문화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남보영·홍이준, 2021; 최가희, 2019), 모든 접촉이 긍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다. 이민정책 태도와 다문화주의 인식의 관계

청년층에서는 중도주의 성향 응답자의 21.42%가 "산업 분야에 제한 없이 누구나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해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동화주의 성향 응답자는 인력 부족 산업에 한해 허용(62.15%)하거나, 인원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25.78%)를 보였다.

중년층의 경우, 중도주의 성향 응답자는 외국 인력을 최대한 허용하자는 응답이 60.5%로 가장 많았다. 반면 동화주의 성향 응답자는 외국인 수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을 선호했다(34.15%).

노년층에서는 다문화주의 성향(53.11%)과 중도주의 성향(59.74%) 응답자가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동화주의 성향 노년층 거의 절반(46.27%)이 인력 부족 산업 내에서도 외국인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다문화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외국 인력 수용에 대해 개방적이며, 동화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제한적이고 보수적인 정책 선호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5 나가며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외국인 인구 증가라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세대별로 이주민 수용성, 이민정책 태도, 다문화주의 성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대별 수용성 인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청년층은 유학생이나 영주권자에 대해 높은 수용성을 나타냈지만, 난민과 같은 집단에 대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용성을 보였다. 중년층은 일상적이고 제한된 관계 형성 수준에서 이주민을 수용하는 실용적 태도를 보였고, 노년층은 보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제한적인 관계만을 수용하거나 이주민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양가적 태도를 취했다.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정책 태도 또한 세대별로

상이하였으며, 이러한 태도는 다문화주의 성향과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청년층은 산업 제한 없이 외국 인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가장 높은 개방성을 보인 반면, 노년층은 외국인 수에 대한 제한을 상대적으로 보다 강하게 지지하였다. 다만 모든 세대에서 인력 부족 산업 분야의 외국 인력 허용 필요성에는 절반 이상이 동의함으로써, 구조적 인구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 기반은 형성되어 있었다.

다문화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일수록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동화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는 보다 제한적이고 엄격한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향 차이는 세대 간에도 반영되어, 청년층은 다문화주의 성향이 강하고, 노년층은 동화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또한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응답자 집단에서 다문화주의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형성이 단순한 정책적 선호를 넘어서, 다문화 수용성, 외국인 접촉 경험 등 인식 기반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민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정책 간의 조화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간 이주민 수용성 인식과 접촉 경험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요구된다. 청년층은 다문화 수용성이 높고 외국인과의 일상적 접촉 빈도도 잦기 때문에, 참여 중심의 시민교육이나 디지털 기반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노년층은 동화주의 성향과 문화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사례 중심의 교육이나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대면 프로그램이 적절하다. 중년층은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다소 민감하므로 정책의 구조와 효과, 공정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수용성 제고에 핵심적일 수 있다. 이처럼 세대 간 인식 차이는 정책 수용성 형성의 주요 요인이므로, 정책 설계와 집행 단계에서 이를 반영한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이주민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 특히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장기 체류자나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이주민에 대한 안정적 지위 보장이 따라야 한다. 아울러 해당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이민정책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셋째, 이주민을 단일한 범주로 간주하지 않는 정책 정교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주민의 체류 목적, 자립 가능성, 사회적 기여 수준 등에 따라 국민의 수용성에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난

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결혼이주민이나 영주권자에 대한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이주민'이라는 추상적 범주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할 경우, 정책 수용성과 실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에는 이주민 유형별 맞춤형 권리 보장과 통합 지원 방안이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인식과 제도 간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국민의 정책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국 단위의 대표성을 갖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대별 이주민 수용성 및 이민정책 인식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세대 간 인식 변화의 장기적·동태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패널조사를 병행하여 인식 변화의 추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응답자의 자기보고 방식에 근거하고 있어, 실제 행동이나 태도와 괴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성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인식과 실천 간의 간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외국인과의 '접촉 빈도'에 초점을 두었지만,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접촉의 '양'뿐 아니라 '질' 역시 이주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향후에는 접촉의 맥락, 내용, 상호작용의 질적 특성까지 고려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대별 맞춤형 전략은 이론적 제안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국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곽윤경, 주유선, 우선희. (2019).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곽윤경, 김기태, 정세정, 강예은, 김지원. (202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범수, 김병로, 김성희, 김학재, 이성우, 조용신, 조현주, 김민지. (2023). **2023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김석호. (2019).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한국의 사회동향 2019**, 347-356.

김이선, 최윤정, 장희영, 김도혜, 박신규. (2021). **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사회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남보영, 홍이준. (2021). 외국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간접 접촉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3), 181-208.

여성가족부. (2023).「**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배포자료**.

장주영. (2021). 한국인의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이슈브리프, 03**. https://www.mrtc.re.kr/data/04.php?admin_mode=read&no=674&page=&make=&search=

최가희. (2019). 한국인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 인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4), 279-303.

통계청. (2024. 4. 11.). **2022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Bogardus, E. S. (1925).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299-308.

# Generation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Policy in South Korea

Kwak, YoonKy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generational attitudes in South Korea toward immigrant acceptance, immigration policy preferences, and multicultural orientations. These issues are especially salient in a society facing a declining working-age population due to low fertility and aging, alongside a steady increase in immigration. Using data from the 11th Survey on Social Cohes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study identifies clear generational differences. Young adults showed relatively high accept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permanent residents—a trend also observed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relation to permanent residents. In contrast, acceptance of refugees was consistently low across all generations. Regarding immigration policy, while most respondents agreed on the need to admit foreign labor in industries facing labor shortages, older adults were more likely to support stricter limitations on the number of immigrants. Additionally, individuals with stronger multicultural orientations expressed more inclusive attitudes toward foreign labor, whereas those with stronger assimilationist tendencies favored more restrictive policies. These findings offer valuable insights for designing effective and generation-sensitive social integration policies.